

정후식이 만난 사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강단 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 “사법 농단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업적에 대한 집착 탓”

지난달 19일 퇴임한 김이수(65) 전 헌법재판관이 다음 달부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중,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41년 동안 함께했던 법복을 벗고 후진 양성에 나서게 된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꼽혀 왔다. 첨예한 정치적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달리 도드라지는 소신을 밝혔기 때문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듬해 현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보충 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도 많이 내렸다.

‘소수’로서 고뇌와 번민의 세월이 외롭기도 했을 법하지만 김 전 재판관은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수원 동기들 가운데 40년 이상 헌법에 재직할 사례가 드물다”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

뢰와 성원 속에 퇴임하게 돼 분에 넘치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 자락 자택에서 그동안 현재의 결정 과정과 역할, 사법부 위기, 법관의 자세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8 대 0 전원 일치로 인용됐다. 결정 과정은 어떠했나.

▲탄핵이 되면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데 당시 재판관 두 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탓에 결과만이 아니라 시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파면 결정을 내리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가급적 한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다만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성실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어서 나는 보충 의견을 냈다. 참사 발생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행위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헌재 6년을 포함 41년간의 법조 생활을 회상하며 광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 봤다. 활동도 이석기의 경기도당 회합 발언이나 토론 내용 등이 일부 어긋나기도 하지만 이는 그 그룹의 책임이지 통합진보당 전체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봤다. 정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존립 근거를 갖는 만큼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해산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크게 바뀐다.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보는가.

▲미국처럼 종신직이 아니라 임기가 6년으로 정해져 더 자주 바뀌는 현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 현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떤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너무 파당적인 것이냐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재판을 오래한 사람들은 늘 균형과 합리성을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관의 자세가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막연한 중립보다는 뚜렷한 소신을 지닌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 소장으로 내정

적으로는 재판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석을 통해 좀 더 넓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결정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고 깊은 논증을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두 차례 소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찬양·고무·동조 중 ‘동조’ 부분과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의 처벌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지금은 이르지만 남북이 적대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격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온다면 손을 봐야 할 조항들이 늘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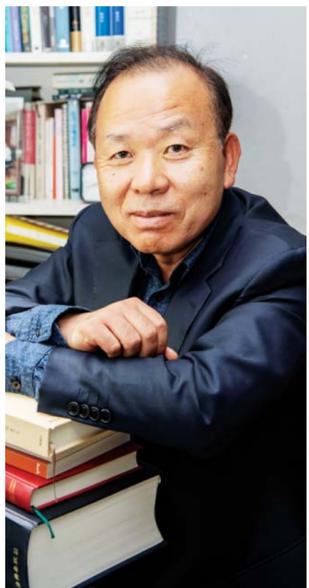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다음 달부터 강단에 서게 됐다.

▲법관으로서 경험했던 사안들에 대한 고뇌와 판단, 법조인의 자세, 사건에 임하는 자세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탄핵 및 정당 해산 사건의 이론과 프로세스, 헌재 소장직과 재판관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할 것이다.

사법부 내부의 독립 중요...법관들 압력에 굴절되면 안 돼

“헌재 소장 임명 등의 부결 예상 못해 상당한 충격받았다”

헌재는 헌법 수호자이자 민주주의 보루...치밀한 논증 필요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취지였다.

-사법부가 사법 행정권 남용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져 있다.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태다. 문건이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실제 재판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은 좋은 재판을 하는데 핵심적인 바탕이다. 심각한 것은 그런 일이 외부 작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벌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사법부 내부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다. 대법원장이 자기의 업적에 너무 집착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법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은 법관이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존경하는 이유는 일제에 대한 항거도 있지만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지켜 냈다는 점 때문 아닌가. 또한 법관들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

야 한다. 내부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그에 따라 굴절되면 안 된다.

-지난 8월 헌재는 대법원의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서 위헌을 결정했다. 사실상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당시 다뤄진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은 모두 문제가 있었다.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 시효를 6개월로 줄인 판결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을 한 것이다.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생활 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민주화보상법도 정신적 피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

한다.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에 따라 내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기간과 형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내가 주심을 맡은 사건이었다. 대체복무 기간은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1.5배 정도가 적당하다. 1과 3분의 1에서 1과 3분의 2 사이가 타당하다. 다른 나라도 차이가 거의 없다. 독일은 현역과 복무 기간이 거의 같다가 모병제가 되면서 폐지됐다. 대만은 한두 달 정도 긴 수준이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에서 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어떤 입장이었는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규정한 민중 주권, 민생 자립 경제, 코리아 연방제 등의 강령에는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전원 일치’ 공감...세월호 책임질타 보충 의견 내

국가보안법 남북 적대 관계 해소되면 손질해야 할 조항 많아

로스쿨서 41년 재판 경험 나누며 탄핵·정당 해산 연구할 것

했지만 지역민의 성원에도 임명 동의안이 3개월 만에 국회에서 부결됐다. 아쉬움이 컸을 텐데.

▲상당한 충격이었다. 부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러시아 헌재 창설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가 5·18 기념식에 맞춰 앞 당겨 귀국했다. 5·18에 대한 부채 의식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 전까지는 대법원장이나 헌재 소장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자유한국당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다른 야당도 정치적 상황 때문인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힘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출범 30년을 맞았다.

▲헌재는 6·10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탄핵 심판 등을 거치면서 헌법의 최종적 해석자이자 수호자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상징이자 보루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앞으로 사회의 차별과 편견, 소외된 부분에도 헌법의 기본 가치들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인

-후배 법관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판사는 오로지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관심과 시간을 많이 쏟을수록 좋은 판결이 나온다. 논어에 ‘군자유구사(君子有九思)라 는 구절이 나오는데 군자가 생각해야 할 그 아홉 가지 모두가 법관이 지녀야 할 자세와 맞닿아 있다. 특히 견득사(見得思義)라 했는데, 판결을 할 때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3월 재판관 회의에서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돼 8개월이 넘게 내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임 속에 헌재를 이끌었다. 1980년 군 검찰관 시절에는 5·18 희생자들을 검사하기도 했다. 부인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등에서 폴코스를 19회 완주할 정도로 마라톤 애호가이기도 하다. 지금도 매일 아침 5~7km를 뒀다.

/논설실장 who@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에너지관리공단**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농협** 70~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